

반도체 특강 듣고 법안 챙기고...尹 정부 힘 신는 국민의힘

尹, 반도체 산업 육성 중요성 강조
국민의힘, 규제 개혁 방안 마련 나서
공장 증설 등 관련 법률 정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산업 육성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 벗고 나섰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패권 전쟁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당,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행하는 반도체 특별 강의를 들었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산업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강의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연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와 비슷했다.

의총에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병욱 의원 주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토론회도 가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산업계·대학·정부가 함께 반도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프(talpiot)'와 같은 국방 연계 인력 양성 제도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탈피오프는 이스라엘 군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학위 취득, 5년의 추가 복무 방식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가 제대 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어 고용 인력도 가장 많다"며 반도체 공장

증설과 새로운 인력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강의를 언급하며 "수출액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육성·발전시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지, 무엇을 할지 정부와 인식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잘 경청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당내에 설치해 규제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도 전날(13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책 뒷받침에 나서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 등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3→15%), 중견기업(5→20%), 중소기업(12→25%) 등으로 확대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 민주당 "국회 패싱"

대통령실 "청문회 열었다면... 아쉬움" 野 "당장 국세청장 임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3일)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가 됐다. 특히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청장 임명에 대해 "일단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느냐"며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 달 16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야의 원 구성 험겨 루기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정숙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회에는 지금 경

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부대표는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 원 구성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단행하면서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與, 서민경제 피해대책 마련 물가·민생안정 특별위 설치

국민의힘이 서민경제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14일 설치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물가·민생안정 특위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경제·물가 관련 자문위원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해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은 21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다. 위원은 정운천·박수영·서일준·배준영·최승재·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 등이 내정됐다. 첫 회의는 오는 16일로, 최근 경제 현안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남주하 서강대(경제학) 교수, 신영호 농협 하나유통농협유통 대표이사, 장용성 서울대(경제학)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등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책위 산하 물가·민생안정 특위 설치 사실을 밝혔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특위 설치 배경에 대해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를 경기 침체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민생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野 "개미들 피눈물... 정부는 속수무책"

미국발 긴축 공포에 한국 증시 대타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1000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윤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한국 시장은 주식·원화·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미국 발(發)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 9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을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원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 달라는 무디고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쥐어 짜기로 고

통스러운 민생 현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가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무능만 탓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